

우리나라 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 : 현황과 이슈

2019.2.15**

박정수 (서강대학교)

1. 연구의 배경

- 우리경제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음.
- 저성장의 원인
 - 성장저하의 원인은 총수요 부진과 공급측 측면의 산업경쟁력 저하에 있음.
 - 재정확대와 임금상승을 통한 총수요진작은 경기침체를 완화시키고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은 있으나 지속성장의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함.
 - 생산성 향상 및 산업경쟁력 제고없는 지속성장은 가능하지 않음.
-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함.
 - 자영업자의 비중문제, 주력산업의 부진, 저생산성 및 생산성 저하, 비용경쟁력 약화 등

산업의 두 측면

- 산업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봄
 - 산업적 측면: 제조업/비제조업
 - 기업형태 측면: 법인/개인사업자

	제조업	비제조업
법인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산업의 부진 및 새 성장 산업의 부재 - 임금상승으로 비용경쟁력 약화 - 저부가가치 산업에 집중 - 중소/대기업 양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생산성 산업에 집중 - 외국 대비 낮은 생산성 - 과잉규제로 인한 혁신기회 상실
개인사업자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 중 낮은 고용비중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생산성 산업에 집중 - 높은 개인사업자 비중과 과다경쟁 - 저임금, 저소득층 집중 분포

자료

이슈	통계명	출처	사용한 주요 변수	조사대상 범위
부가가치 및 생산성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부가가치, 인건비, 종사자수 등	10인 이상 사업체 전수조 사 (법인, 개인 포함)
	서비스업조사	통계청	매출액, 인건비, 종사자수 등	전국 20만개 사업체 표본 조사 (법인, 개인 포함)
	국민계정	한국은행	부가가치, 소득지표 등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산업별 기업 재무제 표	국세청신고 기업 자료 2008년~: 전수조사, 법인 (+ 큰 규모 개인사업체) ~2007년: 표본조사, 법인
	한국생산성본부 보고 서	한국생산성 본부	국제 비교 자료	국내: 통계청 및 국민계정 자료 이용, 국외 자료 수 집
고용 및 임금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산업별, 종사자지위 별 고용 등	전국 3.5만 가구 표본조 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 조사	고용노동부	임금 등	1인 이상 3.2만 사업체, 근로자 80만명

연구의 내용

2. 우리나라 산업의 현황과 이슈

2-1. 법인/개인부문의 부가가치 및 고용 비중

2-2 주력산업의 부진 (제조업)

2-3. 노동생산성 수준, 분포 및 변화

2-4: 비용경쟁력: 노동생산성과 임금

2-5. 경제성장과 임금

3. 신성장동력 관련 산업정책

3-1. 과거 정부의 신성장동력 관련 산업정책

3-2. 현 정부의 산업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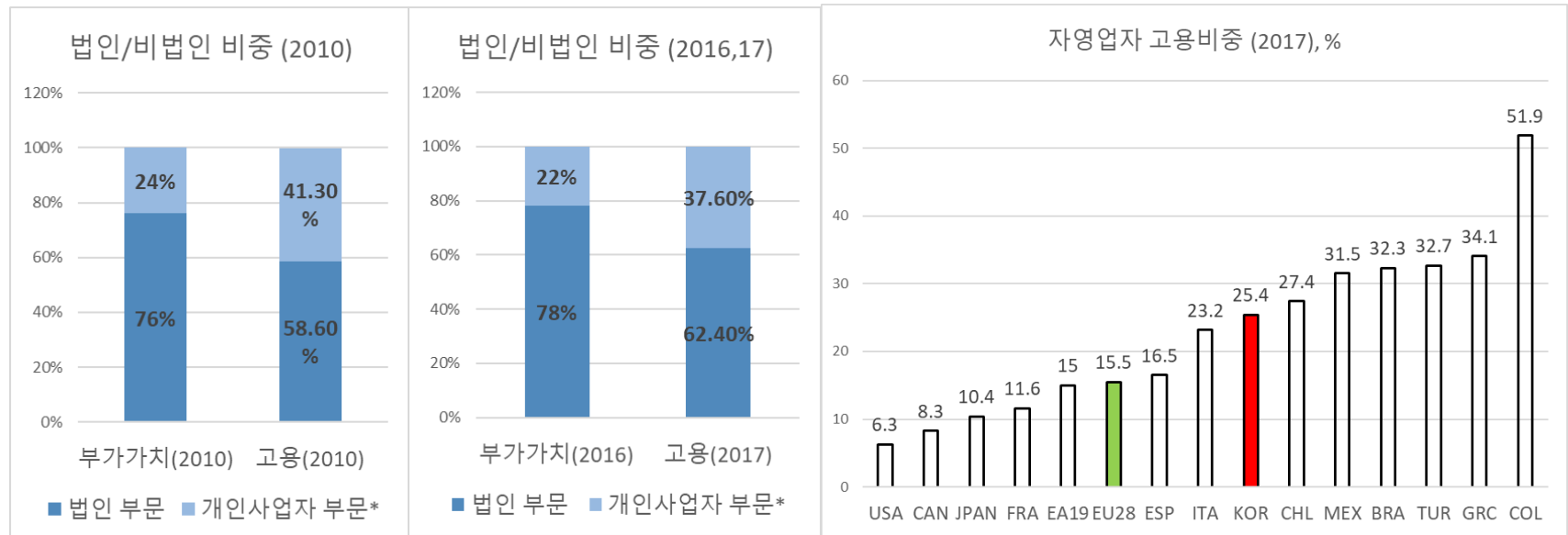
3-3. 주요국의 대응

3-4 새로운 정책 틀의 필요성

2. 우리나라 산업의 현황과 이슈

2-1. 법인/개인의 부가가치 및 고용 비중

-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주요 선진국의 2배를 초과함.
- 개인사업자 부문이 전체 부가가치의 22% (2016), 고용의 37.6%** (20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 개인사업자 부문 중 비임금근로자는 25.4%. 여기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60.8 만)의 피고용인을 평균 2인으로 가정하여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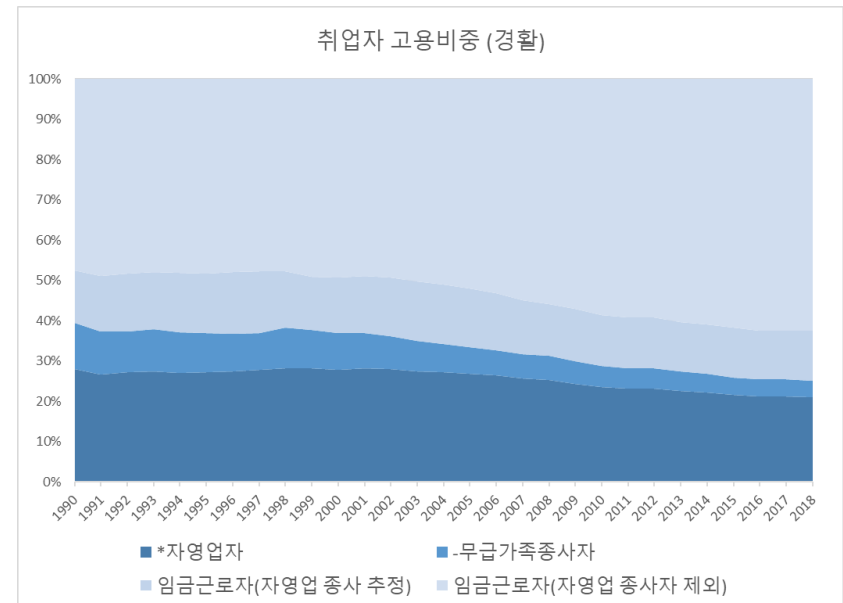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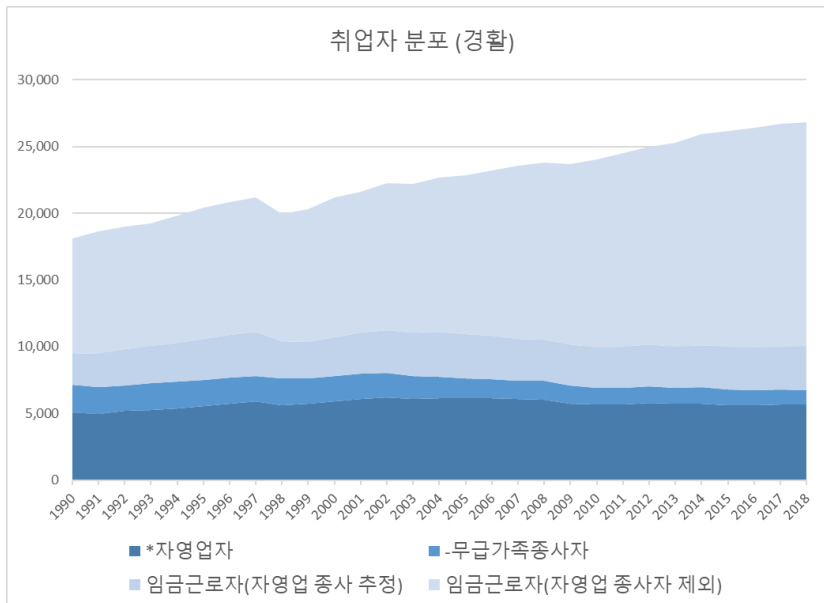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기초로 저자추정

* 자영업자 고용비중은 피고용인을 포함하지 않음.

** 개인사업자 고용비중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피고용인을 평균 2인으로 가정하고 이를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와 합산하여 추정하였음.

법인/개인부문 취업자의 고용비중

- 개인사업체 종사자 비중이 1990년 52.4%에서 2018년 37.4%로 감소
 -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는 25.4%지만 피고용인은 약 12.3%에서 18.5%로 추정되며 이를 합하면 개인사업체 부문 종사자는 37.4%~43.6%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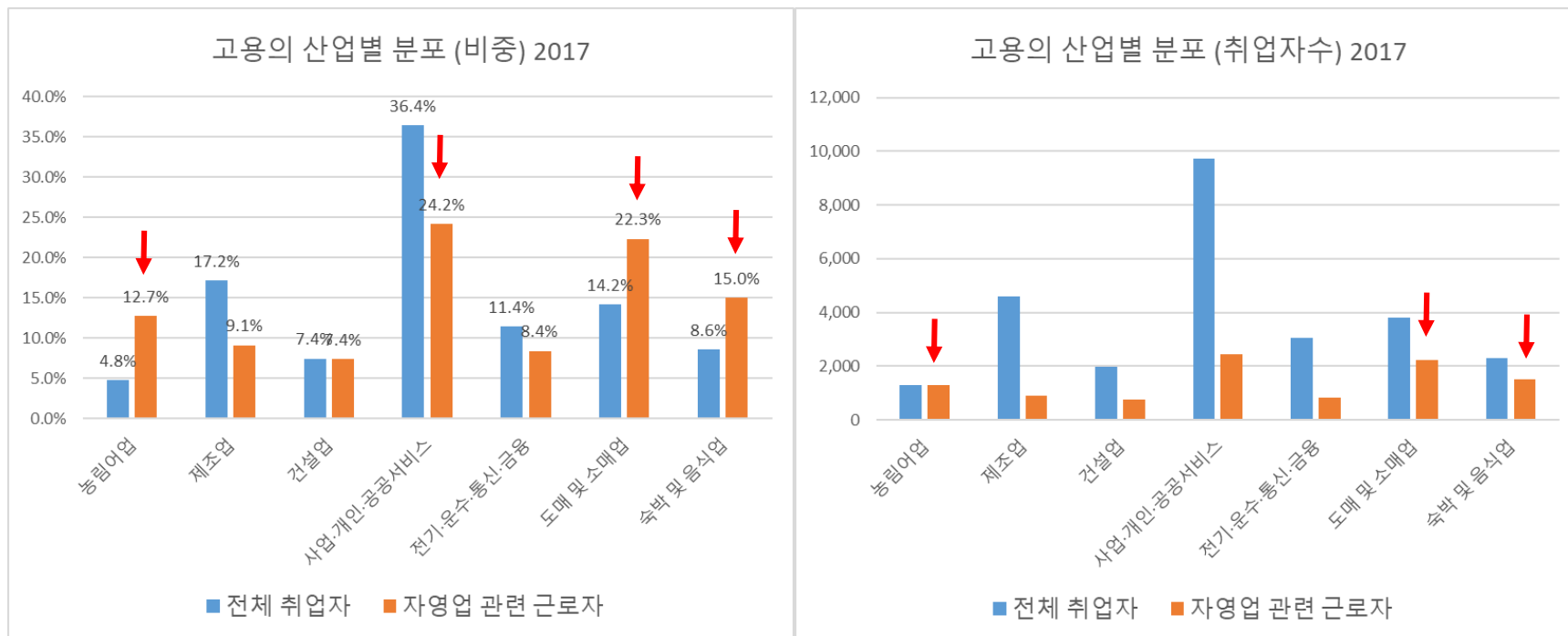


	1990		2000		2010		2018	
	A	B	A	B	A	B	A	B
자영업자	28.0%		27.8%		23.5%		21.0%	
무급가족종사자	11.4%		9.2%		5.3%		4.1%	
임금근로자(자영업 종사 추정)	12.9%	19.4%	13.7%	20.6%	12.6%	18.9%	12.3%	18.5%
임금근로자(자영업 종사자 제외)	47.6%	41.2%	49.3%	42.5%	58.6%	52.3%	62.6%	56.4%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기초로 저자추정

법인/개인부문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 전체취업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36.4%), 제조업 (17.2%), 도매 및 소매업 (14.2%) 순으로 분포
- 개인사업자 부문 근로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24.2%), 도매 및 소매(22.3%), 숙박 및 음식점업(15.0%), 농림어업 (12.7%)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도매 및 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농림어업' 등 저생산성 서비스업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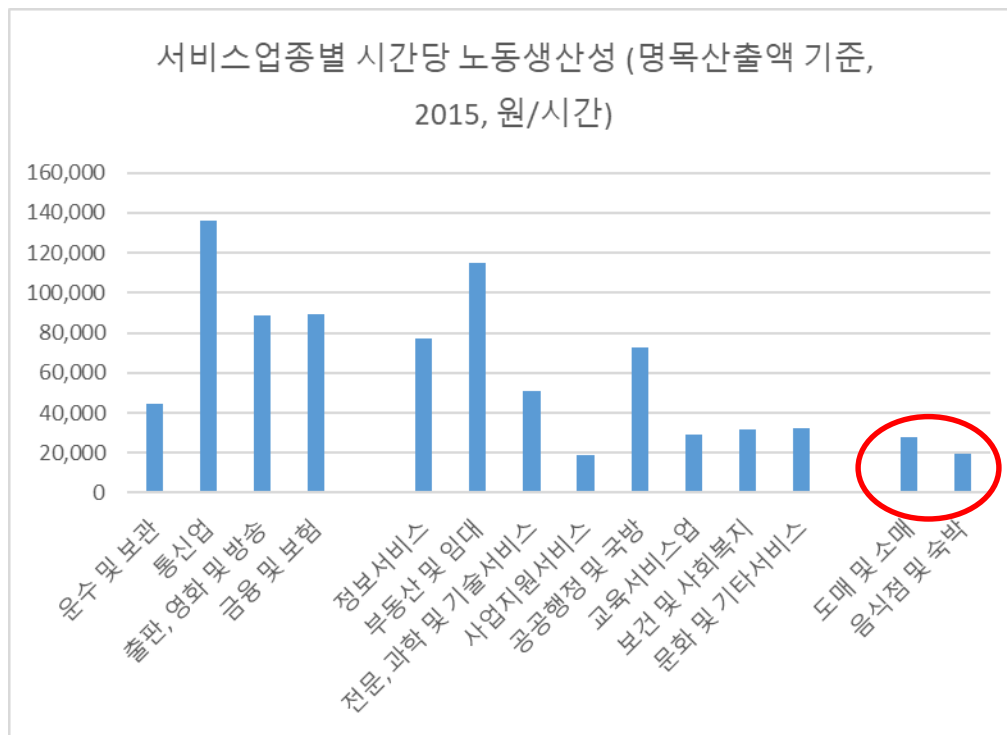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2017

* 자영업관련 근로자는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 피고용인의 합으로 저자추정.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평균 고용인 2인 가정.

서비스 부문 업종별 시간당 노동생산성

- 서비스 부문 노동생산성은 매우 이질적임.
- 개인사업자가 집중되어 있는 도매 및 소매, 음식점 및 숙박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은 편임.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2019), 한국생산성본부의 자료를

* 시간당 노동생산성지수 = $\frac{\text{명목총산출}}{\text{총근로시간}} \times 100$

** 산출량은 통계청의 산업생산지수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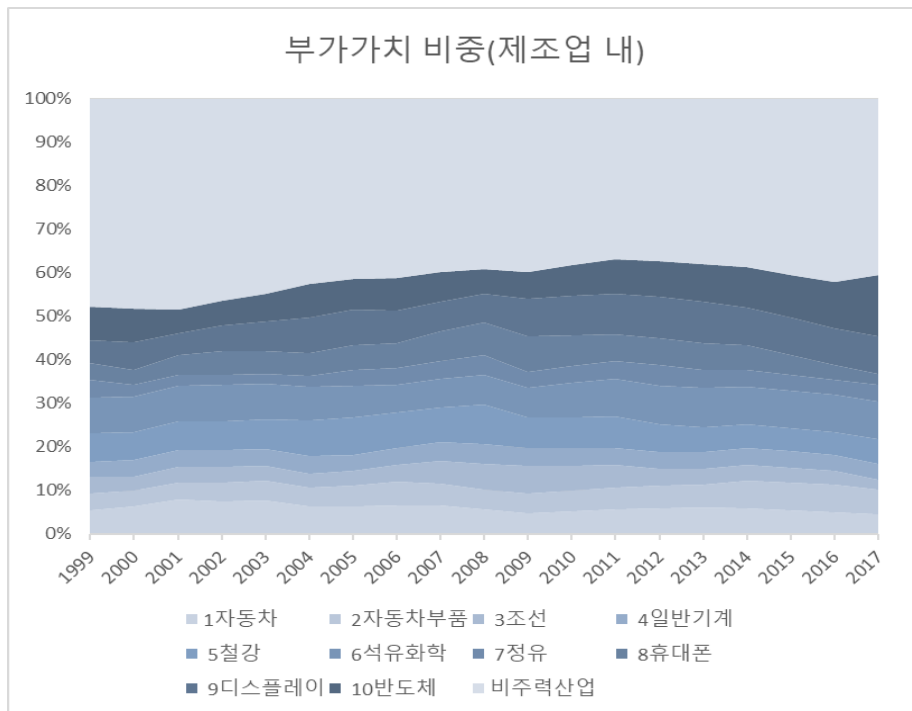
2-2 주력산업의 부진 (제조업)

- KERI(2016),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글로벌경쟁력 비교", 정책연구 2016-01 의 주력산업 구분 적용함
- 한국의 10대 주력산업 품목: 자동차, 자동차부품,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정유, 휴대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 업종 구분은 KSIC code 기준

	name_maj	ksic2	ksic3	ksic2_name	ksic3_name
1	자동차	30	30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2	자동차부품	30	30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2	자동차부품	30	30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3	조선	31	31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4	기계	29	29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5	철강	24	241	1차 금속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5	철강	24	242	1차 금속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
5	철강	24	243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주조업
6	석유화학	20	20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6	석유화학	20	20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6	석유화학	20	20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6	석유화학	20	20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6	석유화학	20	20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화학섬유 제조업
7	정유	19	19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7	정유	19	19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8	휴대폰제조(무선전화기)	26	26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9	디스플레이	26	26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9	디스플레이	27	27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10	반도체	26	26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비중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 주력산업이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1.9% (44.5%)에서 2011년 63.2%(55.2%)에 달했으나 그후 2017년 59.5%(45.4%)로 점차 감소. (괄호 안은 반도체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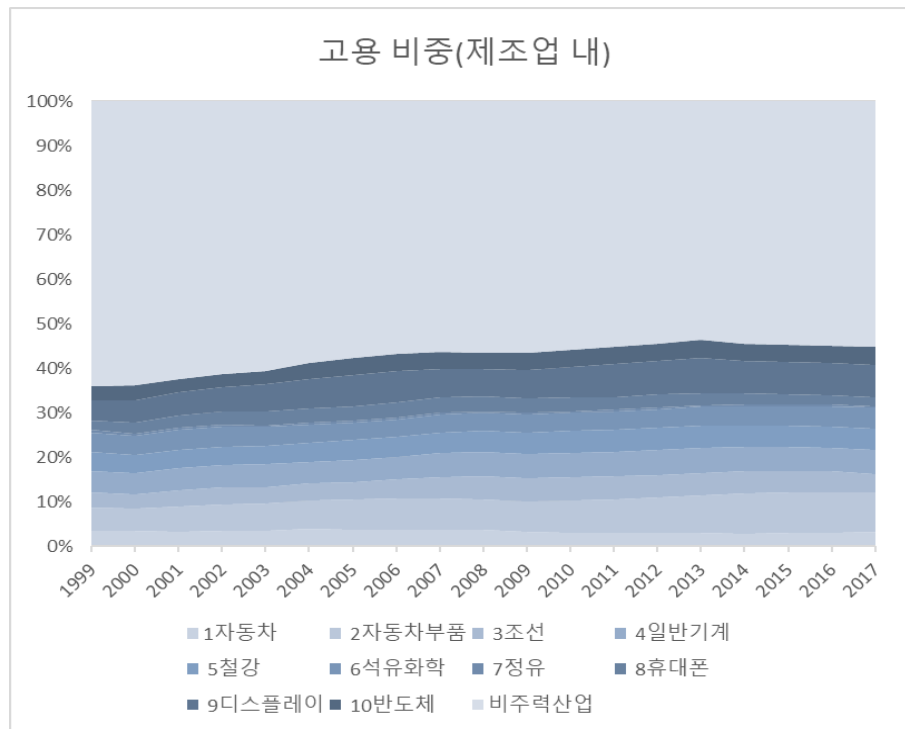
부가가치비중 (제조업 내)

	비주력산업	주력산업전체	주력산업 (반도체제외)
2000	48.1%	51.9%	44.0%
2005	41.5%	58.5%	51.5%
2010	38.2%	61.8%	54.7%
2017	40.5%	59.5%	45.4%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저자계산

주력산업의 고용비중

- 주력산업이 제조업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6.0% (32.7%)에서 2013년 46.4%(42.4%)에 달했으나 그후 2017년 44.8%(40.7%)로 점차 감소. (괄호 안은 반도체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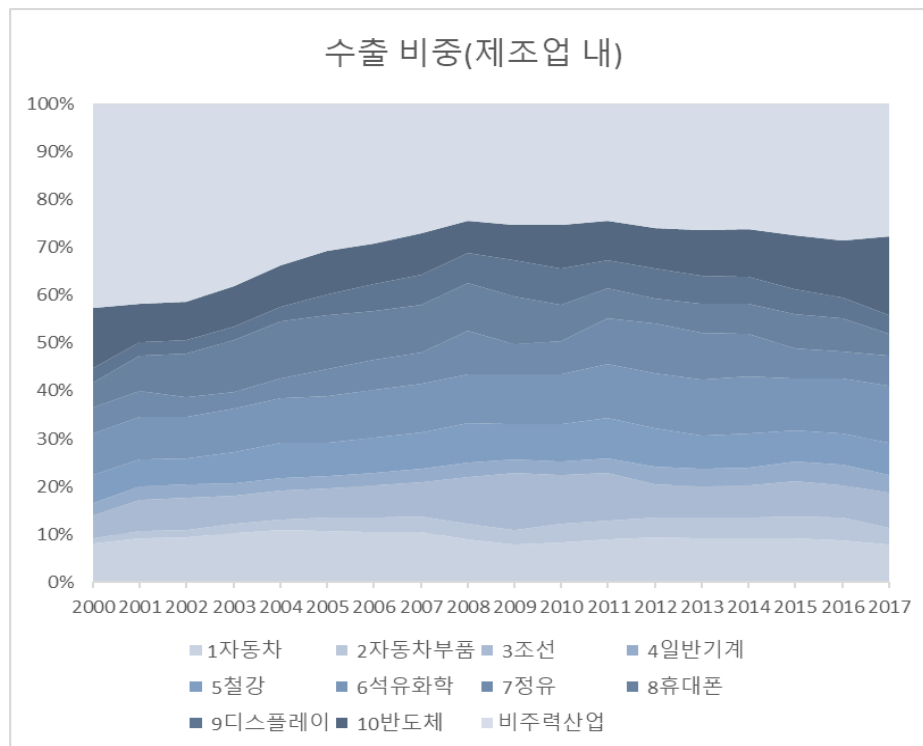
고용비중 (제조업 내)

	비주력산업	주력산업전체	주력산업(반도체 제외)
2000	63.8%	36.2%	32.7%
2005	57.6%	42.4%	38.4%
2010	55.8%	44.2%	40.4%
2017	55.2%	44.8%	40.7%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저자계산

주력산업의 수출비중

- 주력산업이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7.3% (44.9%)에서 2012년 75.6%(67.4%)에 달했으나 그후 2017년 71.6%(55.9%)로 점차 감소. (괄호 안은 반도체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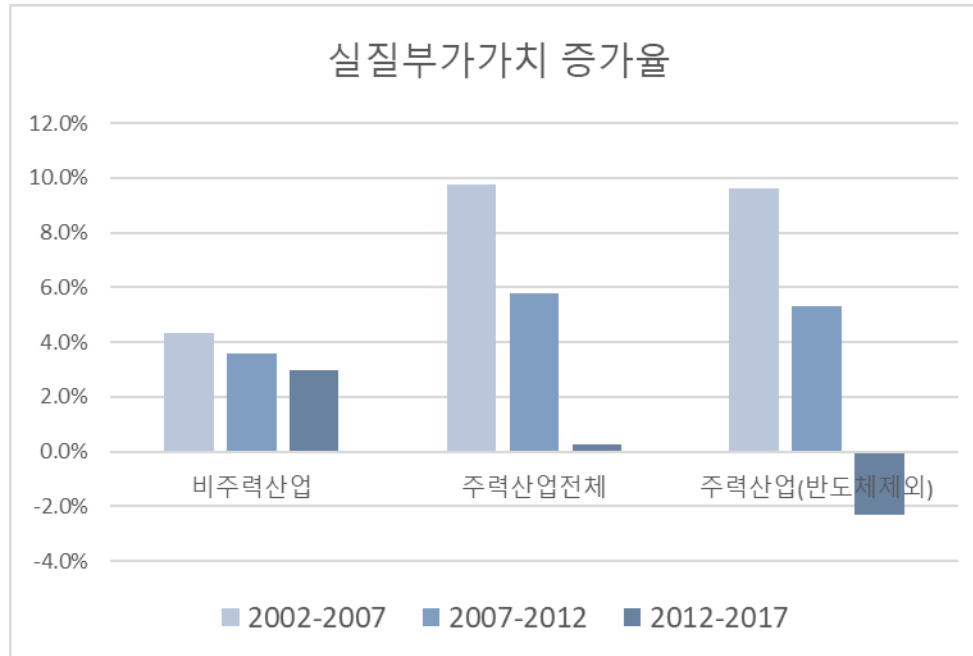
수출비중

	비주력산업	주력산업전체	주력산업(반도체 제외)
2000	42.7%	57.3%	44.9%
2005	30.7%	69.3%	60.2%
2010	25.2%	74.8%	65.5%
2017	27.7%	71.6%	55.9%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 저자계산

기간별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주력/비주력

- 주력산업은 2002-2007년 기간 중 연평균 9.7%(9.6%), 2007-2012년 기간 중 5.8%(5.3%) 증가하였으나 2012-2017년 기간에는 0.3%(-2.3%) 증가율을 기록하여 부진함. (괄호 안은 반도체 제외)
- 2012-2017년 기간 중 반도체, 반도체부품, 석유화학을 제외한 모든 주력산업 부문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휴대폰 -16.1%, 조선 -8.2%, 자동차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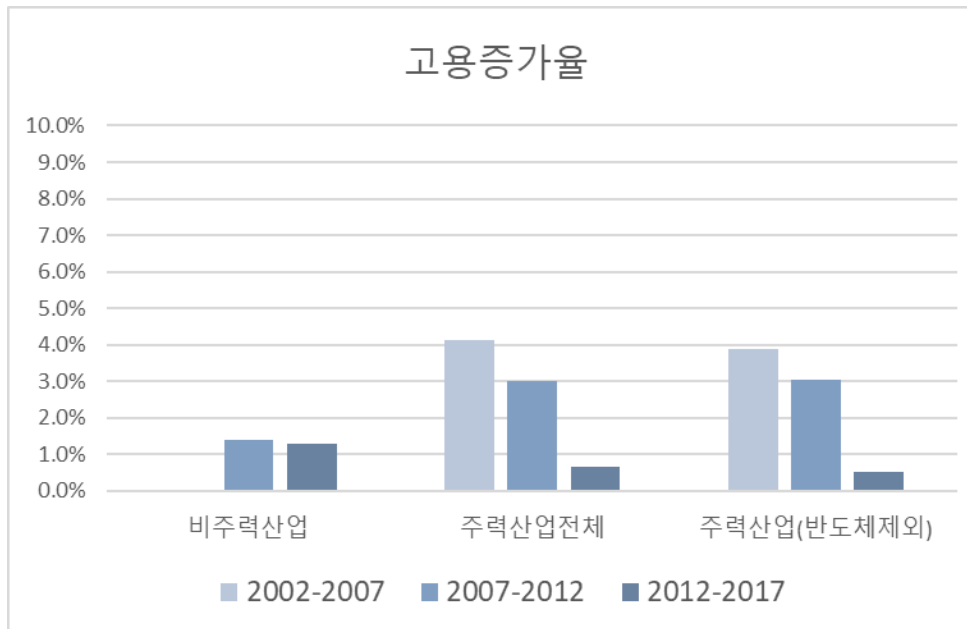


	2002-2007	2007-2012	2012-2017
비주력산업	4.3%	3.6%	3.0%
1자동차	4.2%	2.9%	-3.4%
2자동차부품	11.3%	5.0%	2.6%
3조선	14.0%	-0.6%	-8.2%
4일반기계	10.4%	2.7%	-0.2%
5철강	11.0%	0.5%	-1.3%
6석유화학	2.5%	11.0%	0.5%
7정유	20.6%	7.6%	-2.2%
8휴대폰	11.6%	3.0%	-16.1%
9디스플레이	10.8%	11.2%	-0.8%
10반도체	10.7%	9.2%	11.8%
주력산업전체	9.7%	5.8%	0.3%
주력산업(반도체 제외)	9.6%	5.3%	-2.3%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저자계산
 * 제조업 GDP 디플레이터 사용.

기간별 고용증가율: 주력/비주력

- 주력산업은 2002-2007년 기간 중 연평균 4.1%(3.9%), 2007-2012년 기간 중 3.0%(3.0%) 증가하였으나 2012-2017년 기간에는 0.7%(0.5%) 증가율을 기록하여 부진함. (괄호 안은 반도체 제외)
- 2012-2017년 기간 중 특히 휴대폰 -5.7%, 조선 -3.3% 부문에서 고용 감소폭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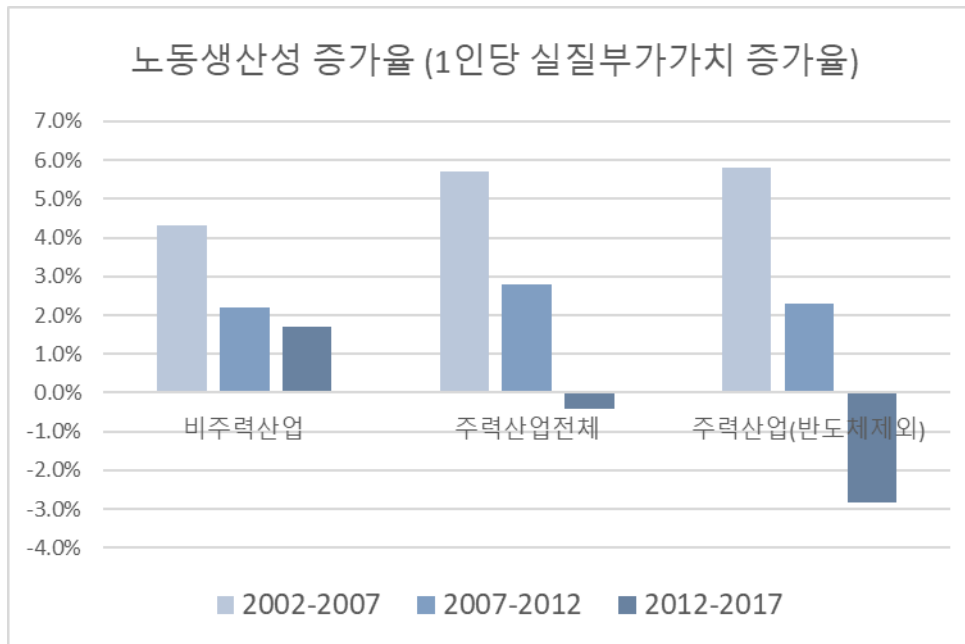


	2002-2007	2007-2012	2012-2017
비주력산업	0.0%	1.4%	1.3%
1자동차	2.6%	-2.1%	2.7%
2자동차부품	5.2%	4.3%	3.4%
3조선	6.8%	3.2%	-3.3%
4일반기계	2.7%	3.2%	0.3%
5철강	4.3%	3.4%	0.8%
6석유화학	-0.1%	3.2%	2.8%
7정유	0.0%	3.4%	0.0%
8휴대폰	3.7%	-1.3%	-5.7%
9디스플레이	5.2%	5.5%	-0.3%
10반도체	6.8%	2.9%	1.9%
주력산업전체	4.1%	3.0%	0.7%
주력산업(반도체제외)	3.9%	3.0%	0.5%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저자계산

기간별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율: 주력/비주력

- 주력산업은 2002-2007년 기간 중 연평균 5.7%(5.8%), 2007-2012년 기간 중 2.8%(2.3%) 증가하였으나 2012-2017년 기간에는 -0.4%(-2.8%) 증가율을 기록하여 부진함. (괄호 안은 반도체 제외)
- 2012-2017년 기간 중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주력산업에서 실질노동생산성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휴대폰 -10.2%, 자동차 -6.1%, 조선 -4.8% 생산성 감소폭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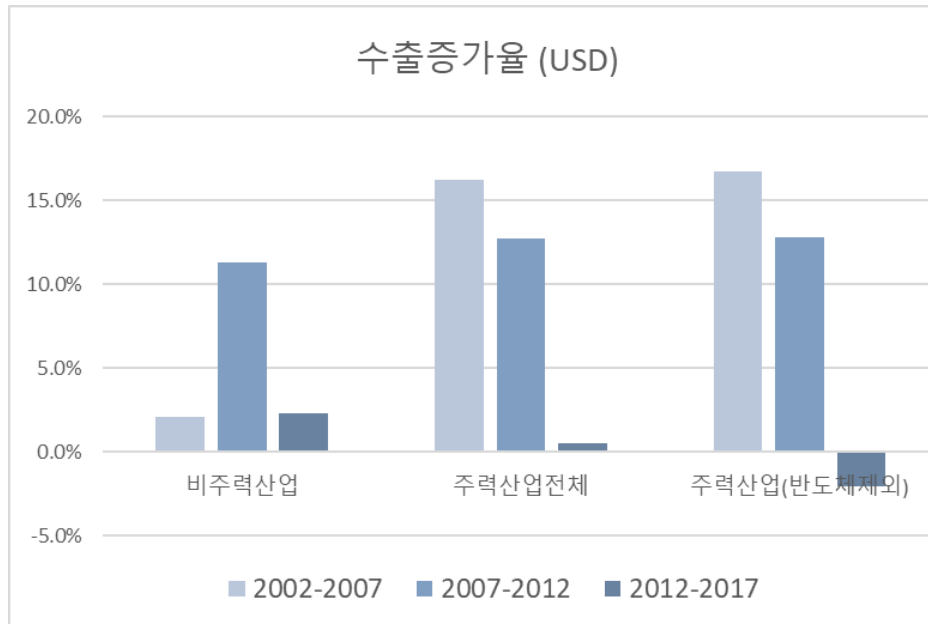
	2002-2007	2007-2012	2012-2017
비주력산업	4.3%	2.2%	1.7%
1자동차	1.6%	5.0%	-6.1%
2자동차부품	6.2%	0.8%	-0.7%
3조선	7.4%	-3.8%	-4.8%
4일반기계	7.8%	-0.5%	-0.4%
5철강	6.8%	-2.9%	-2.1%
6석유화학	2.6%	7.9%	-2.3%
7정유	20.7%	4.2%	-2.2%
8휴대폰	8.0%	4.4%	-10.2%
9디스플레이	5.8%	5.8%	-0.5%
10반도체	4.1%	6.4%	9.9%
주력산업전체	5.7%	2.8%	-0.4%
주력산업(반도체제외)	5.8%	2.3%	-2.8%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저자계산

* 제조업 GDP 디플레이터 사용.

기간별 수출 증가율(명목 \$): 주력/비주력

- 주력산업 수출은 2002-2007년 기간 중 연평균 16.2%(16.7%), 2007-2012년 기간 중 12.7%(12.8%) 증가하였으나 2012-2017년 기간에는 0.5%(-2.1%) 증가율을 기록하여 부진함. (괄호 안은 반도체 제외)
- 2012-2017년 기간 중 특히 정유 -8.9%, 디스플레이 -7.4% 부문의 감소폭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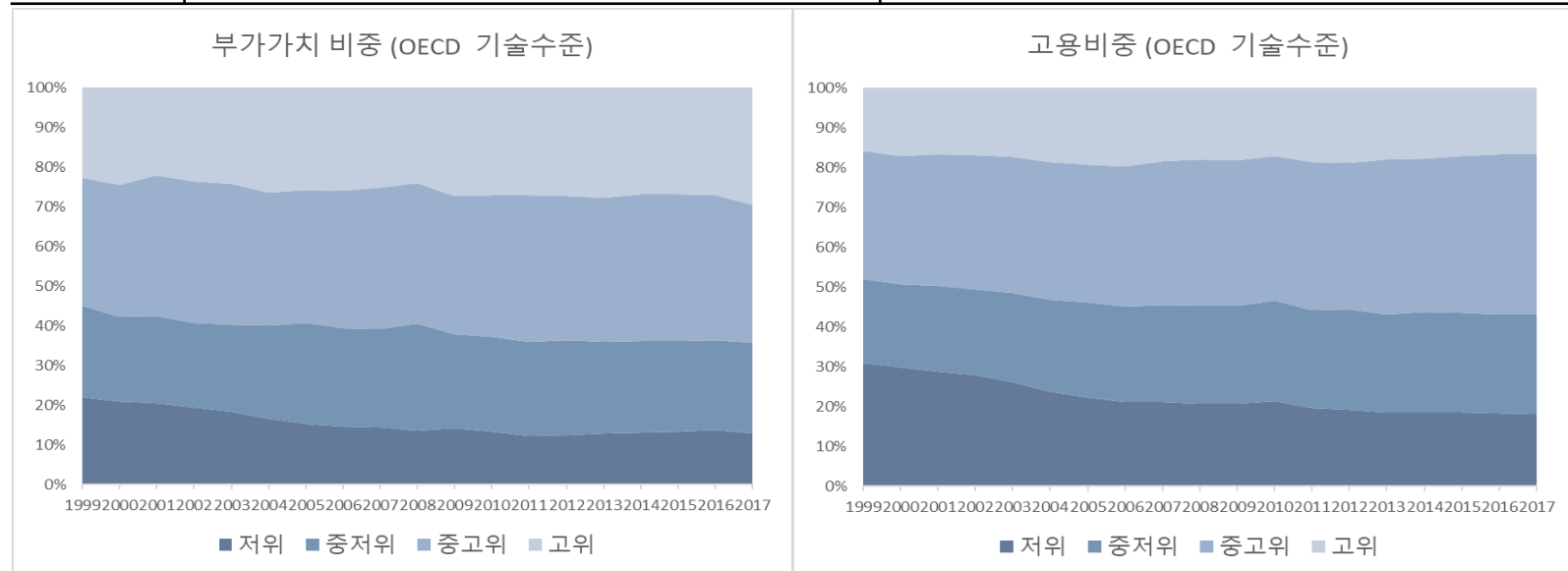


	2002-2007	2007-2012	2012-2017
비주력산업	2.1%	11.3%	2.3%
1자동차	13.7%	9.5%	-2.5%
2자동차부품	29.0%	18.7%	-2.6%
3조선	13.0%	11.5%	1.7%
4일반기계	11.5%	16.9%	2.2%
5철강	18.8%	14.0%	-3.1%
6석유화학	14.6%	14.7%	1.8%
7정유	22.6%	23.2%	-8.9%
8휴대폰	13.1%	-0.8%	-2.5%
9디스플레이	31.0%	11.6%	-7.4%
10반도체	12.7%	12.1%	14.6%
주력산업전체	16.2%	12.7%	0.5%
주력산업(반도체제외)	16.7%	12.8%	-2.1%

OECD 기술수준별 산업의 분포

- 부가가치 측면에서 고위기술산업의 비중은 2000년 24.3%에서 2017년 29.4%로 증가한 반면 저위기술산업의 비중은 동기간 21.0%에서 13.0%로 감소하여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음.
- 고용측면에서는 고위기술산업의 비중이 늘지 않았으며 중고위와 중저위기술 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함.

	부가가치 비중				고용비중			
	고위	중고위	중저위	저위	고위	중고위	중저위	저위
2000	24.3%	33.3%	21.3%	21.0%	17.0%	32.2%	20.9%	29.9%
2005	25.8%	33.4%	25.3%	15.4%	19.3%	34.4%	23.9%	22.3%
2010	27.0%	35.7%	23.9%	13.4%	17.0%	36.3%	25.3%	21.4%
2017	29.4%	34.9%	22.7%	13.0%	16.7%	40.2%	24.9%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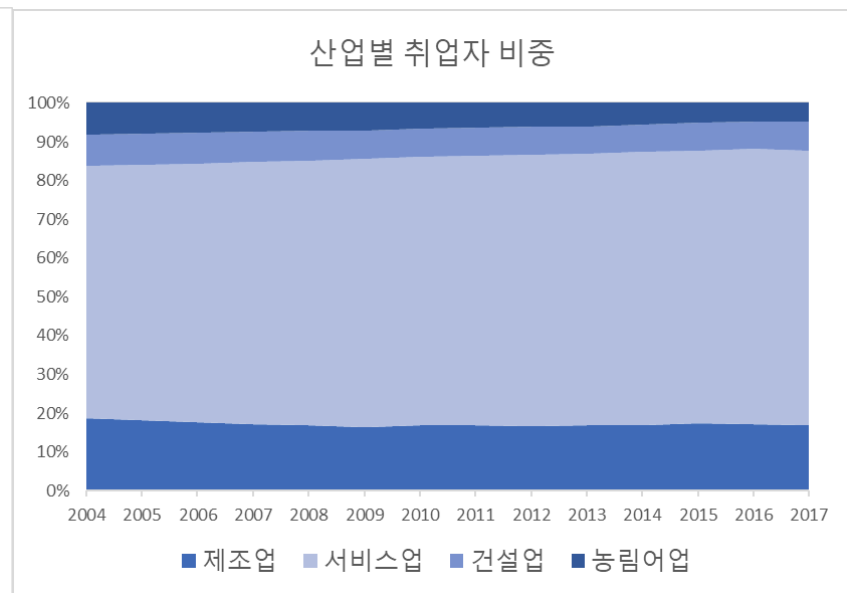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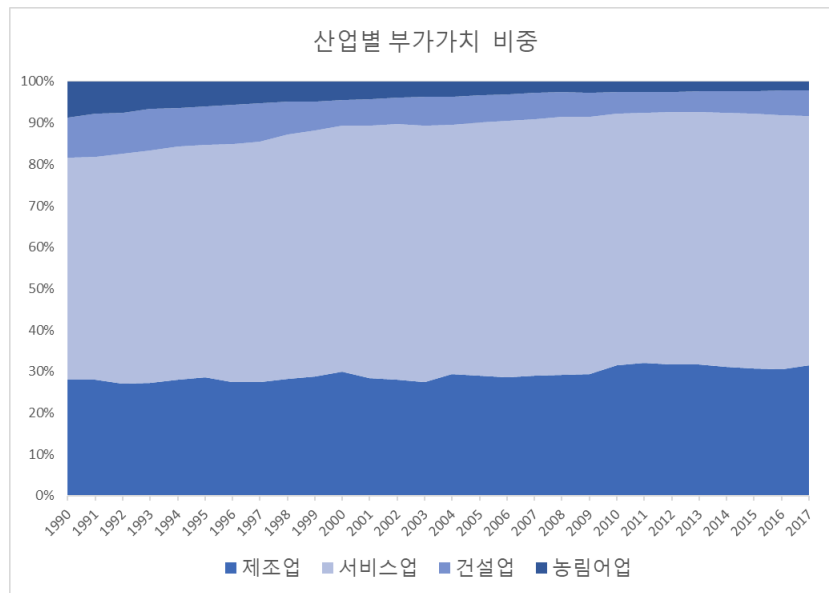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저자계산

2-3. 노동생산성 수준, 분포 및 변화

2-3-1. 산업별 비중

-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1990년 28.1%에서 2017년 31.4%로 증가한 반면 고용비중은 2004년 18.6%에서 2017년 16.9%로 감소
-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1990년 53.5%에서 2017년 60.2%로 증가하였고 고용도 2004년 65.3%에서 2017년 70.8%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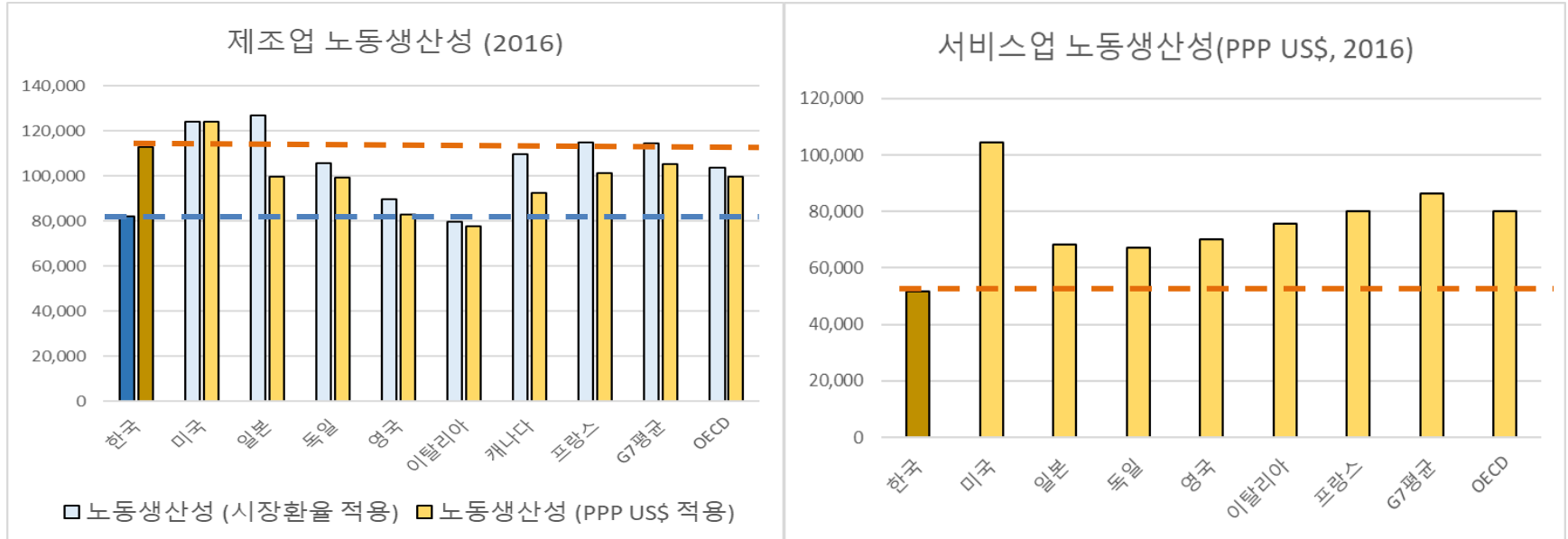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1990	8.7%	28.1%	9.8%	53.5%
2000	4.5%	29.9%	6.2%	59.4%
2010	2.5%	31.5%	5.2%	60.7%
2017	2.2%	31.4%	6.1%	60.2%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2004	8.1%	18.6%	8.1%	65.3%
2010	6.6%	17.0%	7.4%	69.1%
2017	4.9%	16.9%	7.4%	70.8%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초로 저자추정

2-3-2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5개 OECD국가 중 27위
-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35개 OECD 국가 중 21위 (PPP적용 US\$ 기준)
 - 제조업은 5위 (시장환율 적용시 20위), 서비스업은 27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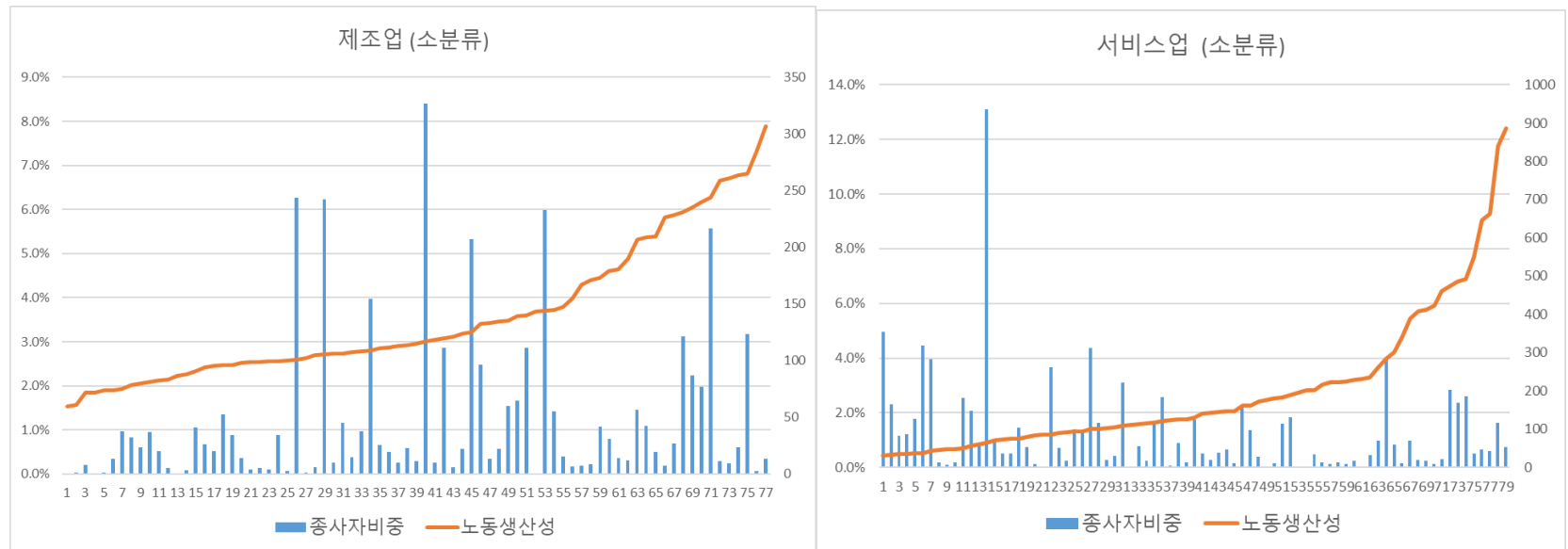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2018)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 2016년 실질 부가가치(2010년 기준)와 취업자수로 계산한 노동생산성(PPP적용 또는 시장환율 적용)을 비교

2-3-3. 저생산성, 저부가가치 산업에 집중

-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 노동생산성 순위에 따른 소분류 산업의 분포
 - 2017년 제조업내 소분류 산업들은 저노동생산성 (저부가가치) 산업에 고용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016년 서비스업내 소분류 산업들은 매우 낮은 노동생산성 (취업자당 매출액) 산업에 고용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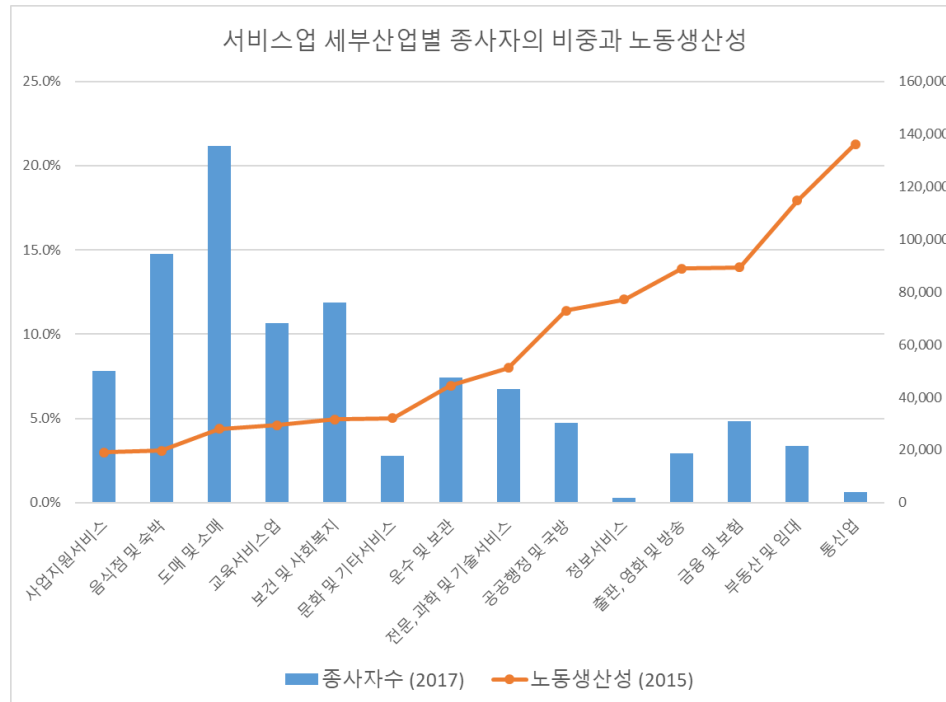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및 서비스업조사, 저자계산

*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취업자당 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취업자당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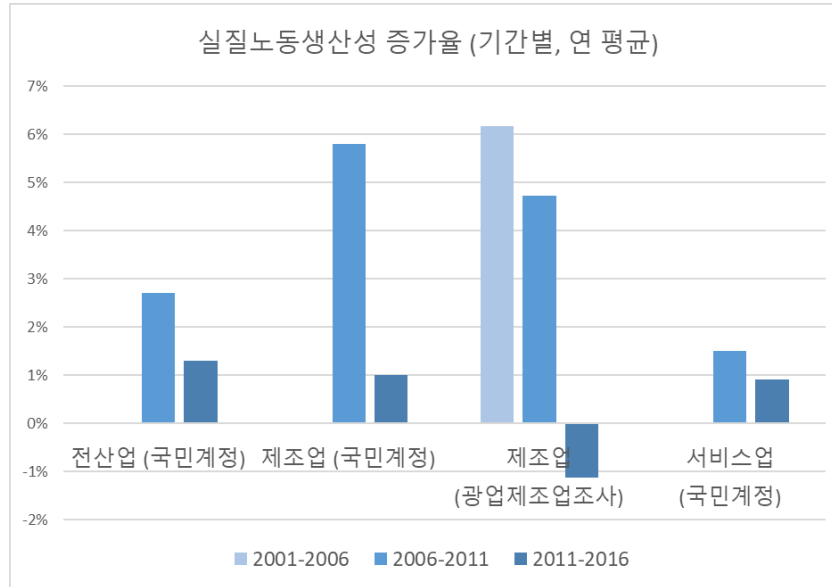
서비스부문의 분포 및 노동생산성의 분포

- 자료: 통계청 산업생산지수와 경제활동인구조사
 - 시간당 노동생산성 기준 (2015), 종사자수 (2017)
 - 역시 저생산성 부문에 고용이 집중되어 있음.



- 출처: 1) 노동생산성은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2019), 한국생산성본부의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 시간당 노동생산성지수 = $[\text{명목총산출} \div \text{총근로시간}] \times 100$
 - 산출량은 통계청의 산업생산지수
- 2) 종사자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수집

2-3-4 노동생산성 증가의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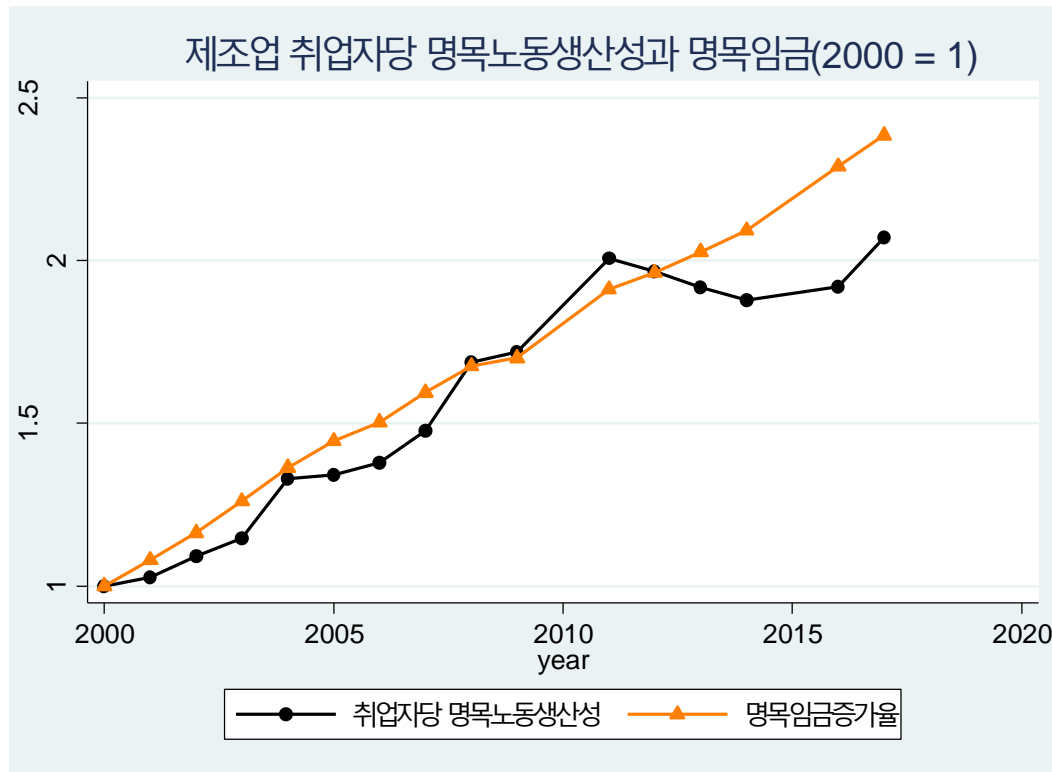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 실질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11년 이후 급락하였으며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두드러짐.

	2001-2006	2006-2011	2011-2016
전산업 (국민계정)		2.7%	1.3%
제조업 (국민계정)		5.8%	1.0%
제조업 (광업제조업조사)	6.2%	4.7%	-1.1%
서비스업 (국민계정)		1.5%	0.9%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자료를 기초로 한국생산성본부 (2018) 계산,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기초로 저자계산

2-4: 비용경쟁력: 노동생산성과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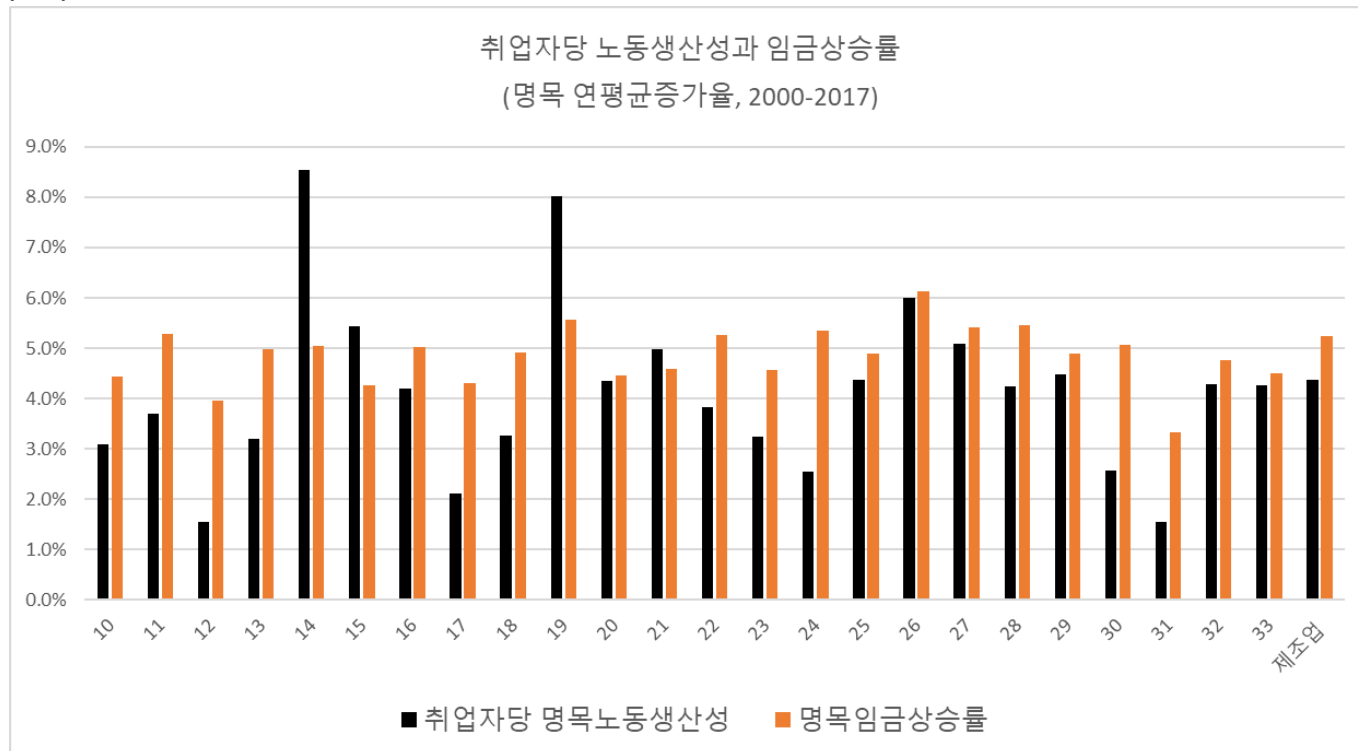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 2000-2017 기간동안 제조업 취업자당 명목노동생산성은 107.1% (연 4.4%) 증가한 반면 동기간 명목임금은 138.5% (연 5.2%) 증가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저자계산

산업별 노동생산성증가와 임금증가율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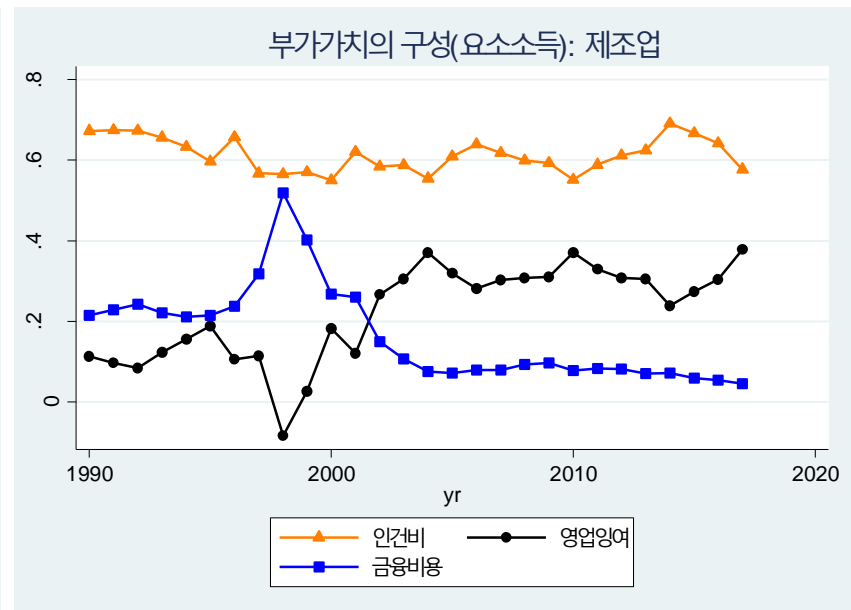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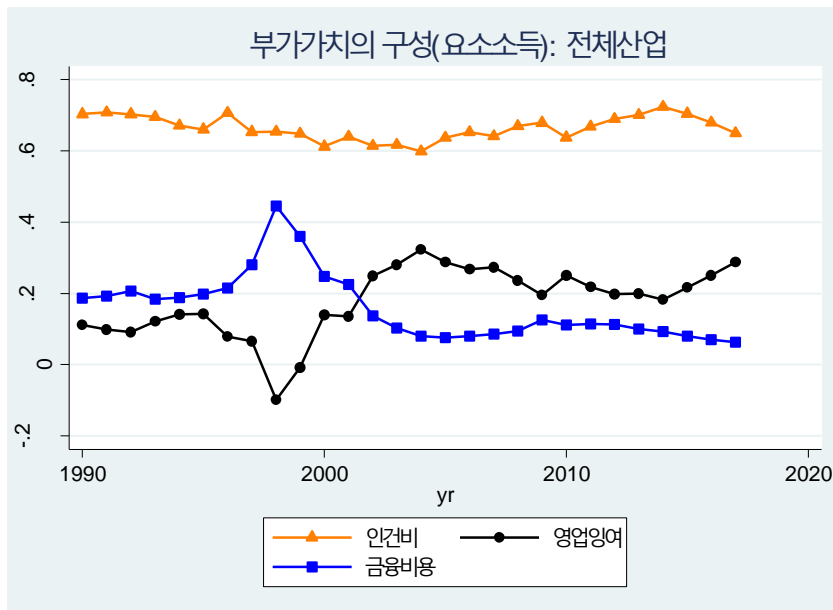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 2000-2017년 기간동안 24개 중분류 제조업 중 4개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명목임금증가율이 취업자당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함.
 - 4개 산업은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등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저자계산

기업 부가가치(요소소득 부분)중 인건비의 비중

-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1990-2017년 기간동안 법인기업의 부가가치 중 요소소득에 해당하는 부분 중 인건비의 비중은 전체산업과 제조업에서 등락을 하며 유지되고 있음.
- 2000 – 2017 기간 동안은 인건비 비중이 상승 추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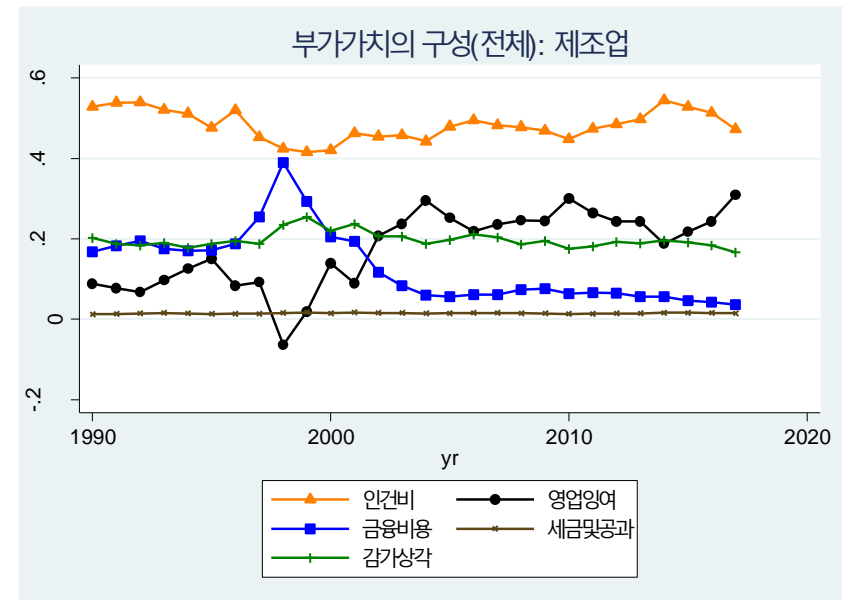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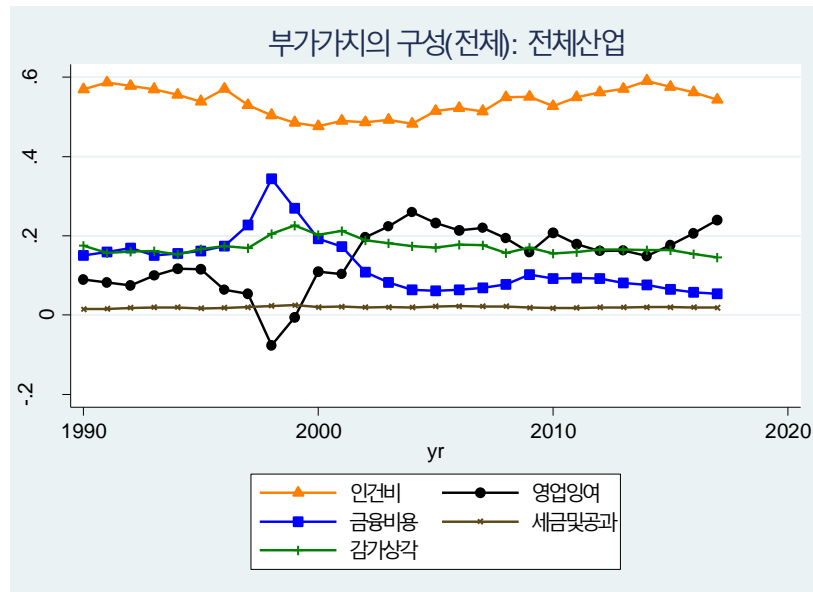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ECOS 기업경영분석, 저자계산

* 전체산업은 2004년 이후만 제공되고 있어, 각 산업별 자료를 토대로 시계열 일관성을 유지하며 그 이전 기간 수치를 추정함.

** 부가가치는 영업잉여, 금융비용, 인건비, 조세및공과, 감가상각 으로 구성됨. 그 중 요소소득에 해당하는 영업잉여, 금융비용, 인건비 부분 간 비중을 구함.

기업 부가가치(전체) 중 인건비의 비중

-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1990-2017년, 2000 – 2017 기간 중 인건비 비중의 추이는 앞서 요소비용 소득 부분 분석과 동일



자료: 한국은행 ECOS 기업경영분석, 저자계산

* 전체산업은 2004년 이후만 제공되고 있어, 각 산업별 자료를 토대로 시계열 일관성을 유지하며 그 이전 기간 수치를 추정함.

** 부가가치는 영업잉여, 금융비용, 인건비, 조세및공과, 감가상각 으로 구성됨.

2-5. 경제성장과 임금

- 경제성장과 임금을 비교할 때 통상적으로 취업자당 실질GDP 증가율(GDP deflator 기준)와 실질임금증가율(CPI 기준)을 비교
- 하지만 임금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GDP도 소득측면에서 보는 것이므로 **임금과 마찬가지로 CPI로 실질화해서 비교(4 -> 5), 또는 명목으로 비교하는 것이 옳음.**
 - 2007~2012: 실질임금상승률(3)과 취업자당 실질GDP증가율(5) 간 격차가 줄어듦
 - 2002~2016: 실질임금상승률(3, 26.9%)과 취업자당 실질GDP증가율(5, 27.9%)은 거의 차이 없음.

<표1> 임금상승률 vs 취업자당 실질GDP증가율(실질노동생산성), 박종규(2014)

	1997~2002	2002~2007	2007~2012	2012~2016
1.명목임금상승률	40.2%	36.1%	12.4%	
2.소비자물가상승률	17.5%	15.8%	14.5%	
3.실질임금상승률(cpi)	19.4%	17.6%	-2.3%	
4.취업자당 실질GDP증가율(gdpdef)	21.0%	17.4%	9.8%	

* 박종규(2014) "임금없는 성장의 국제비교" 금융포커스 4월, 23권 1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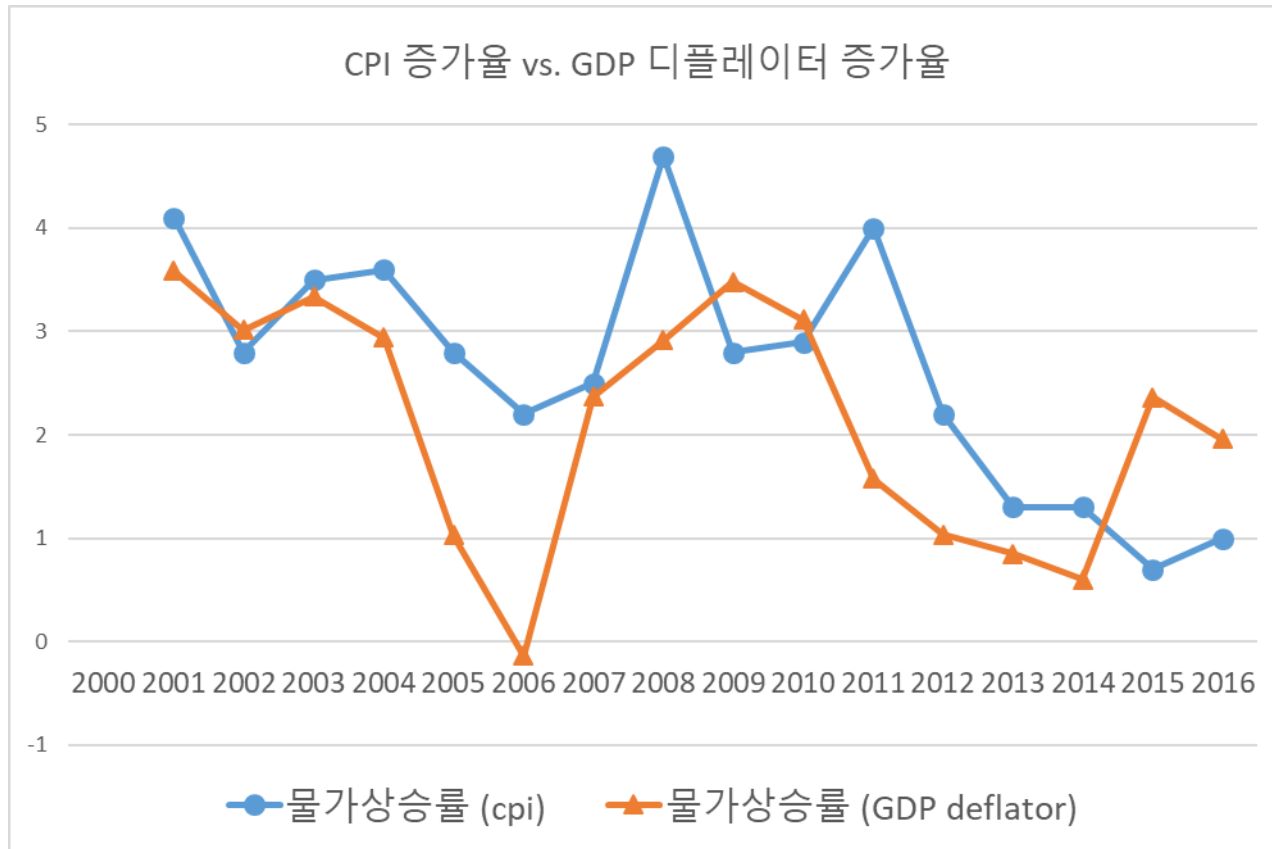
<표2> 임금상승률 vs 취업자당 실질GDP증가율, 본 연구

	1997~2002	2002~2007	2007~2012	2012~2016	2002~2016	2000~2016
1.명목임금상승률		38.3%	16.0%	12.6%	79.9%	109.9%
2.소비자물가상승률		15.5%	17.7%	4.4%	41.8%	51.7%
3.실질임금상승률(cpi)		19.8%	-1.4%	7.6%	26.9%	38.4%
4.취업자당 실질GDP증가율(gdpdef)		17.4%	10.4%	6.3%	37.9%	47.5%
5.취업자당 실질GDP증가율(cpi)		11.9%	5.9%	7.9%	27.9%	36.6%
6.취업자당 명목GDP증가율		29.2%	24.7%	12.8%	81.4%	107.2%

* 자료: 임금: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GDP: 국민계정, 한국은행, 저자계산

물가상승률 (CPI vs. GDP defl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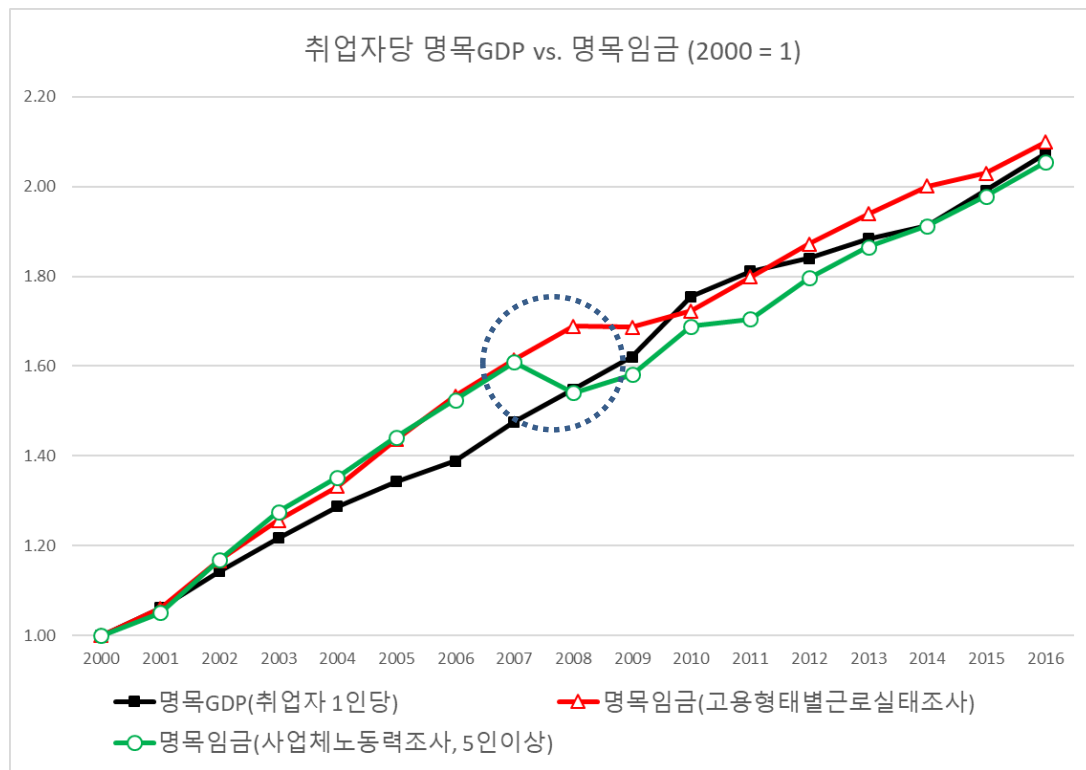
- CPI 기준 물가상승률 > GDP deflator 기준 물가상승률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ECOS

경제성장률 vs. 임금상승률: 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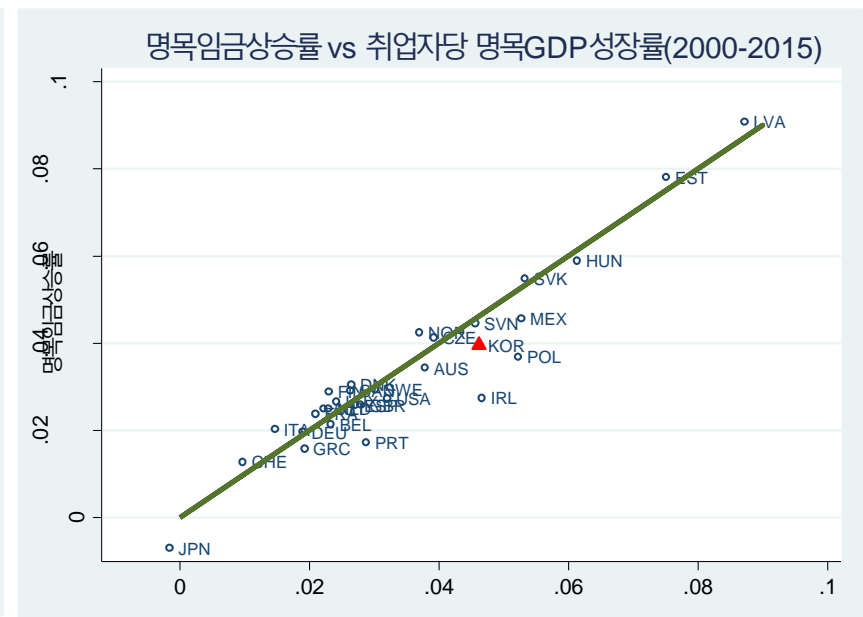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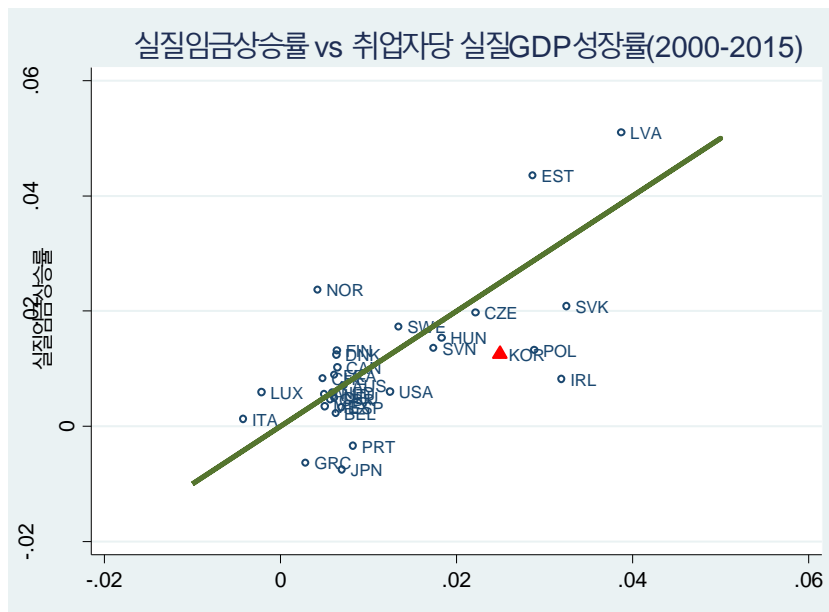
- 취업자 1인당 명목GDP vs. 명목임금 (2000 = 1)
 - 잘못된 실질변수 간 비교와는 달리 임금과 GDP 증가율이 매우 유사함.
 - 사업체노동력조사 명목임금의 경우 2007년과 2008년 사이 명목임금하락은 표본의 단절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고용형태근로실태조사와 큰 차이).



출처: 임금: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GDP: 한국은행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vs. 임금상승률: OECD 국가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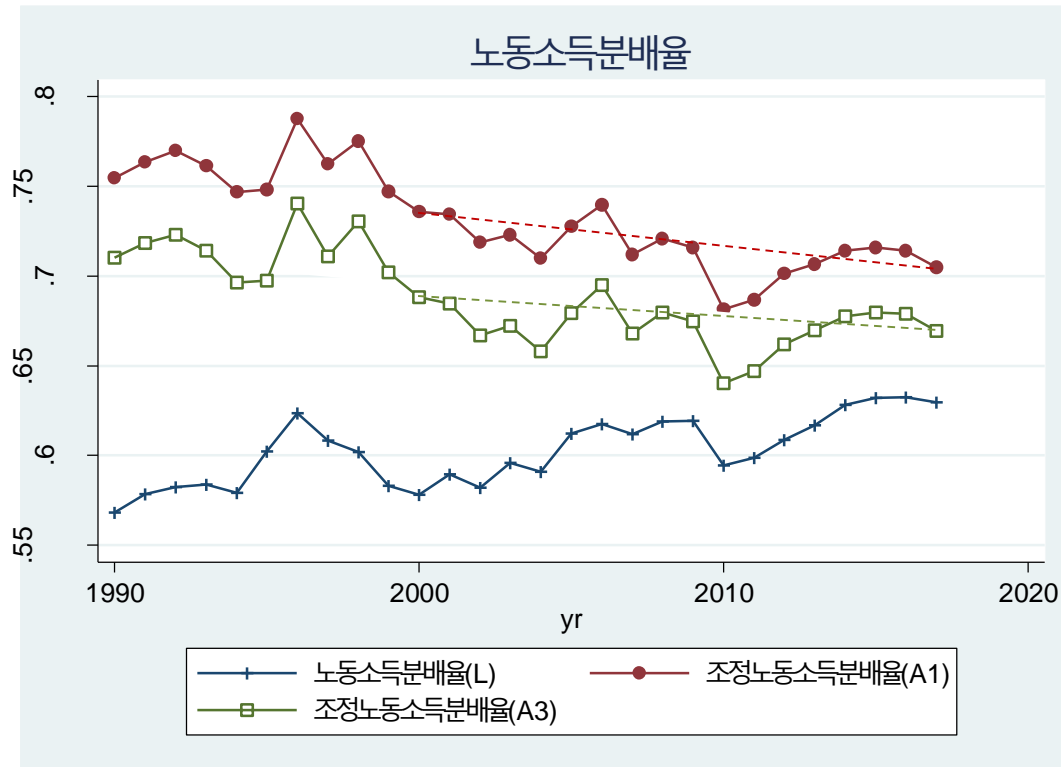
- 국제노동기구(ILO)의 OECD 국가들의 실질임금상승률과 실질GDP성장률 비교도 잘못된 비교
 - 실질화시 임금은 CPI, GDP는 GDP디플레이터를 각각 사용.
- 임금상승과 GDP성장률을 비교할 때에는 명목으로 비교해야 함
- 2000-2015년 기간 명목으로 비교(오른쪽)할 경우 실질변수간 비교(왼쪽)와는 달리 임금상승률과 GDP성장률 간 차이가 줄어듬



자료: OECD EUROSTAT, 저자계산.

* 각각 연평균 변화율

노동소득분배율 (1990-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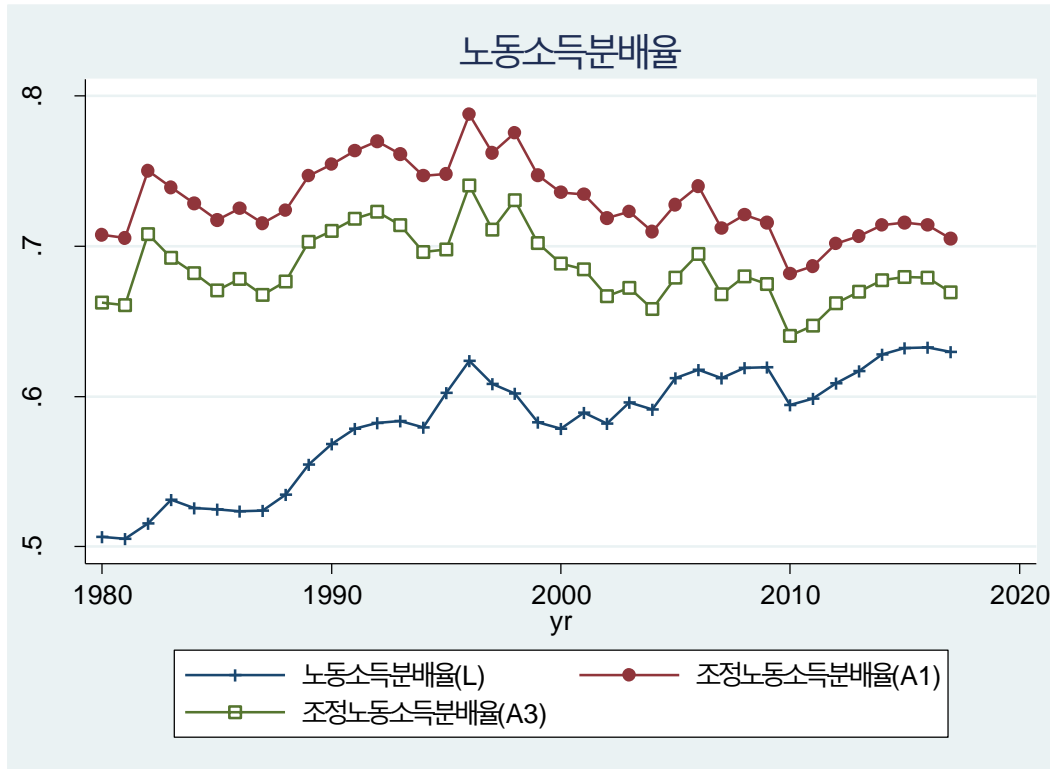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ECOS 국민계정, 저자계산.

* A1은 비법인영업잉여 및 재산소득을 분모에서 제외,

** A3는 A1에 추가하여 피용자보수(분자)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을 평균 3.8인으로 가정한 후 이들 보수가 평균 임금근로자의 50%로 추정한 후 이를 피용자보수에서 제외

- L: 노동소득분배율(공식)
- A1: 조정노동소득분배율 추정
에 있어서 요소비용 국민소득 (NI) 중 분모에서 개인 및 비법인 영업잉여를 제외
- A3: 추가로 분자와 분모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에 종사
하는 피고용인의 추정보수를
제외
 - A3: 피고용인 3.8인 가정 (설문조사 평균치)
- 1990-2017 기간 중 A3에 근
거하면 기존 A1과는 달리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미세하게
하락

노동소득분배율 (1980-2017)



자료: 한국은행 ECOS 국민계정, 저자계산.

* A1은 비법인영업잉여 및 재산소득을 분모에서 제외,

** A3는 A1에 추가하여 피용자보수(분자)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을 평균 3.8인으로 가정한 후 이들 보수가 평균 임금근로자의 50%로 추정한 후 이를 피용자보수에서 제외

- L: 노동소득분배율(공식)
- A1: 조정노동소득분배율 추정
에 있어서 요소비용 국민소득 (NI) 중 분모에서 개인 및 비법인 영업잉여를 제외
- A3: 추가로 분자와 분모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에 종사
하는 피고용인의 추정보수를
제외
 - A3: 피고용인 3.8인 가정 (설문조사 평균치)
- 1980-2017

2-6 소결

- 상대적으로 큰 자영업자 비중
 - 정책 입안시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저생산성부문에 집중된 자영업자들은 퇴로가 없어 퇴출시 복지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제조업: 주력산업의 부진과 저생산성
 - 주력산업을 대체하기 보다는 주력산업내 보다 비탄력적 수요를 갖는 고부가가치 고기술 산업으로 산업고도화를 도모해야 함
- 서비스업: 저생산성
 -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통한 새로운 혁신 필요
- 노동생산성과 임금
 - 임금상승은 노동생산성 상승과 유사하거나 초과하고 있음 -> 제조업부문 비용경쟁력 저하 우려
 - 낮은 실질임금상승은 기업몫이 커진 탓이 아니라 노동생산성 저하에 있음
 -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고민이 필요함 (혁신, 기업동학, 투자, 제도개선 등)

3. 신성장동력 관련 산업정책

3-1. 과거 정부의 신성장동력관련 산업정책

시기 및 내용	선정 산업
참여정부(2003년): 10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지능형 로봇 2.미래형 자동차 3.차세대 전지 4.디스플레이 5.차세대 반도체 6.디지털TV/방송 7.차세대 이동통신 8.지능형 홈네트워크 9.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10.바이오신약/장기
이명박정부(2008년): 17대 성장동력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기술산업(1.신재생에너지 2.탄소저감에너지 3.고도 물처리 4.LED 응용 5.그린수송시스템 6.첨단그린도시), • 첨단융합산업(7.방송통신융합산업 8.IT융합시스템 9.로봇 응용 10.신소재. 나노융합 11.바이오제약. 의료기기 12.고부가 식품산업) • 고부가 서비스산업(13.글로벌 헬스케어 14.글로벌 교육서비스 15.녹색 금융 16.콘텐츠. 소프트웨어 17.MICE. 관광)
박근혜정부(2015)년: 19대 미래성장동력 산업(4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산업(1.스마트자동차, 2.5G 이동통신, 3.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4.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 미래 신산업(5.지능형 로봇, 6.착용형 스마트기기, 7.실감형 콘텐츠, 8.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9.가상훈련시스템) • 공공복지 . 에너지 산업(10.맞춤형 웰니스 케어, 11.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12.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13.멀티미디어직류송배전시스템, 14.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 기반산업(15.지능형 반도체, 16.융복합 소재, 17.지능형 사물인터넷, 18.빅데이터, 19.첨단소재 가공시스템)

출처: 수출입은행-한국재정학회 (2017) "산업구조 개편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방향"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 첨단기술, 신성장동력, 미래성장동력 등의 명칭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
 - 상당 부분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성장에 기여
 - 정보인프라 구축, 정보기술(IT) 산업 육성이 대표적 성공사례
- 각 산업의 경제적 위상, 경제성장 기여도, 기술·기업 경쟁력 수준 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채 산업만 열거
- 지원정책의 지속성·일관성 부족
 - 정부 지원 이후 그 성과가 실현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
 - 정부지원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부교체에 따라 지원전략이나 대상 기술·산업이 변경
- 정부 부처 간, 정부-지자체 간, 공공기관 간 정책 협업도 부족
 - 정부, 지자체, 산업지원기관, 정책금융기관 등이 각각 별도로 지원제도를 운영
 - 이에 따라 산업정책 주무부처의 지원은 기술개발(R&D) 지원에 그침

3-2. 현 정부의 산업정책

-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유망산업을 지정하고 지원정책 수립
- 과거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유망산업 열거식, R&D 지원, 세제 혜택 등 '산업육성' 시각
- 과거 정책의 실효성이 낮았던 원인에 대한 고민이 우선적으로 필요

<표> 주요분야에서 제시하는 신산업 유망분야

	주요분야
8대 핵심선도사업 (혁신성장전략회의, 2017.11)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 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13대 혁신성장동력 (정부부처 합동, 2017.12)	지능화 인프라(빅데이터, 차세대 통신, 인공지능) 스마트이동체(자율주행차, 드론) 융합서비스(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산업기반(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5대 신산업 프로젝트 (산업부 업무보고, 2018.1)	전기·자율주행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8대 주요 핵심분야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5)	드론, 자율차, 제조, 일자리, 교육, 의료, 국방, 재난·안전

출처: 산업연구원 (2018.5.) "문재인 정부 1년 산업부문 성과 평가"

3-3. 주요국의 대응

- 글로벌 경쟁국은 '신산업정책' 으로 대응
 - 자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리쇼어링, 수입 규제 등 산업 부흥전략을 통해 추진 경제 침체 및 일자리 문제 해결 추진
 - 산업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노동 및 일자리 등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성장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노력도 병행

	주요분야
미국 - JOBS - America First	- 민간 주도의 혁신과 정부의 시장 선점 지원 (America First) * (민간) 글로벌 IT기업들이 플랫폼 선점 및 융합을 통하여 창조적 부가가치 창출 * (정부) 원천기술 투자, 스타트업 활성화 등 선제적 제도 마련 등 선순환 생태계 조성 추진
독일 - 인더스트리 4.0 - 중소기업 역량 강화 - 노동 일자리 대응	- 강력한 제조 기반을 활용하여 경제체질 개선 주력 * (민간) Siemens, Bosch 등 민간기업 주도로 제조혁신 추진 * (정부) 범정부 차원의 산업전략으로 '인더스트리 4.0' 지원 + 중소기업 역량 강화 (센터설치, 제조 경쟁력 향상 지원) + 노동 일자리 대응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하여 고용 요건, 교육체계, 사회보장 시스템 개편)
일본 - Society 5.0	- 기술 강점을 활용하여 정부 주도의 국가혁신 도모 * (민간) AI, IoT, 로봇 등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제조현장의 강점 활용 추진 * (정부) 중견기업 육성,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대응 병행. 국가 사회 전반의 구조혁신을 위한 'Society 5.0' 추진
중국 - 중국 제조 2025 - 인터넷 플러스	-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빠른 추월전략 추진 * (민간)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DJI, BYD, Alibaba, Baidu 등 일부 분야 선진국 수준 경쟁력 보유 * (정부) '중국 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등 중장기 산업전략과 강력한 시장 개입을 통해, 세계 최고의 제조강국 도약 추진 (25년까지 독,일 수준의 제조강국 진입, 45년 까지 미국 추월)

3-4 새로운 정책 틀의 필요성

- 혁신성장과 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
 - 산업육성 차원의 기존 추격형 경제의 정책 틀과 시각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새로운 정책 틀의 필요성
 - 금융, R&D, 세제 지원 등 정량적 정책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산업 경쟁력 회복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 개선, 규제개혁이 우선
 - 개인정보보호법, 서비스산업 규제, 포지티브 규제 등을 풀어야 활로가 생김
 -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새로운 제도로 시장을 움직이려고 하거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기 보다는 혁신과 창의성을 추구하는 산업에 인재가 자발적으로 도전하는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야 함
 - 고등교육 경쟁력강화, 재기시스템, 기업규제환경 개선, 행정부담 완화
 - 정책수립 및 평가 방법의 대전환이 필요함
 - 단기 평가 지양,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정책수립과 정의 현대화

감사합니다